



05

남북대화

제1절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추진
제2절 분야별 남북대화 개최 현황
제3절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

제5장 남북대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에 이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행위로 인해 남북대화 여건은 악화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남북 간 핵심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계기시마다 북한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정부는 남북 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요구에 대해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2011년 2월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천안함 폭침은 우리측의 「특대형 모략극」이라는 등 기존의 억지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남북비공개접촉을 왜곡하여 공개하는 등 남북 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도 있었다. 북한은 2011년 9월 이후 취해진 우리 정부의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도 “대결정책의 연속”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북한측의 태도로 말미암아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남북대화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당국 간 남북회담은 군사분야 2회, 인

도분야 4회 등 총 6차례 개최되었다. 한편 백두산 화산 전문가회의 2회 등 민간 차원의 남북대화가 진행되었으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였다.

제절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추진

2010년 하반기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남북대화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8차 남북군사실무회담과 세 차례의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그리고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정부의 「5.24조치」 추진 및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7월 9일) 등 북한에 대한 제재국면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국방위 대변인 성명(7월 24일) 등 잇따른 위협과 대승호 나포(8월 8일) 등으로 남북관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은 미국의 카터 전대통령의 평양방문 및 곰즈 동반 귀환(8월 25일 ~ 27일), 대한적십자사의 북한 신의주 수해지역에 대한 긴급 구호물자 지원 발표(8월 26일) 등으로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9월 7일 대승호 선원 및 선박을 귀환시키고, 9월 10일에는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내는 통지문을 통해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실무접촉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후 남북 간 협의를 거쳐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이 9월 17일, 9월 24일, 10월 1일 세 차례 개최되었다.

2010년 9월 17일, 9월 24일에 개최된 적십자실무접촉에서는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상봉 규모와 장소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기존보다 확대

된 규모”로 이산가족면회소에서의 상봉행사를 진행할 것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전례대로 100명 규모로 진행하며, 이산가족면회소 사용을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지구의 재산 몰수·동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의 이러한 태도는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10월 1일에 열린 세 번째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 것을 재차 촉구하였고, 북한도 이번 상봉행사만큼은 아무 조건 없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실시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하고 남북적십자회담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북한은 2010년 9월 15일 통지문을 통해 9월 24일 군사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후 남북 간 협의를 거쳐 제38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9월 30일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하게 촉구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북한의 검열단을 수용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2010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적십자회담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측에 쌀 5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는 장소 문제가 풀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실무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였다. 남북은 차기 적십자회담을 11월 25일 개최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차기 적십자회담을 이틀 앞둔 11월 23일에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

킴에 따라 우리측은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에 통보하였다. 적십자실무접촉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도발로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2011년 들어 북한은 남북대화를 연이어 공세적으로 제의해 왔다. 2011년 1월 5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우리 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제의하고, 2011년 1월 8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무조건 조속히 개최하자면서 적십자회담,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개성공업지구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어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북한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승지종합개발지도총국,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등의 명의로 된 통지문을 우리측에 보내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남북적십자회담, 금강산 관광회담, 개성공단 실무회담 등의 개최날짜와 장소를 제의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대화 공세에 대해 정부는 2011년 1월 10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우리 국민의 희생을 초래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제지원과 원조를 위한 회담만 제의하고 있는 바,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위장평화공세이자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남북 간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약속 ②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안하였다. 북한이 제안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2011년 1월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기자회견

견 형식을 통해 진정성이 없는 것은 오히려 우리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1월 20일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남북고위급군사회담」과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2월 1일에는 북한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최대한 빨리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의 제와 예비회담 일정을 수정 제의하고, 남북적십자회담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이후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자는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이 2011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수석대표의 수준 및 의제 등과 관련하여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게다가 북한은 천안함 폭침은 우리측의 “특대형 모략극”이며, 연평도 포격 도발은 우리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억지주장까지 하였다.

북한은 군사실무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한미연합훈련,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 등을 빌미로 우리측에 대한 위협과 비난을 지속하였다. 또한 2011년 2월 5일 서해해상에서 우리측으로 넘어온 북한주민 31명 가운데 4명이 귀순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하여 북한측은 북한주민 31명 전원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남북적십자실무접촉」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자고 여러 차례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귀순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입장 하에 5월 4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개최하여 북한주민 4명의 자유의사 확인과 함께 북한지역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북한측에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북한은 2011년 3월 17일에 백두산 화산활동 관련 연구사업을 공동

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제의하고, 4월 27일에는 동해표기와 관련하여 남북 역사학자들의 공동대처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이 무렵 북한은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으로 구성된 ‘디 엘더스(The Elders)’의 방북 시(4월 26일 ~ 28일) 남북회담에 대한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하는 등 대화공세를 재개하기도 하였다.

우리측은 백두산 화산 문제와 동해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차원의 대화이고, 남북한 협의 및 공동대처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따라 백두산 화산 전문가회의가 2011년 3월 29일, 4월 12일 두 차례 문산과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동 합의에 따라 우리측이 학술토론회를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북한측의 반응이 없어 학술토론회는 무산되었다. 또한 북한측이 제의한 동해표기 공동대처 문제 협의에 대해 우리측이 5월 중순에 남북 역사학자들 간 협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역시 북한측은 답신을 보내오지 않았다.

북한은 우리측의 남북대화 제의에는 호응하지 않고 2011년 5월 들어서는 우리측에 대한 비난과 위협을 강화하였다. 5월 30일에는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측과 상대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면, 6월 1일에는 「국방위원회 대변인」 기자회견 형식의 발표문을 통해 ‘남북비공개접촉’을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공개하였다.

남북비공개접촉 왜곡 공개에 대해 우리측은 6월 1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논평에서는 북한의 발표 내용이 우리의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

발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2011년 하반기에 정부는 9월 19일 류우익 통일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책임 있는 당국자 간 안정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9월 21일 ~ 24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방북 승인 등 비정치분야 교류협력 지원, 11월 22일 개성공단 출퇴근 도로 보수공사 착공 등 개성공단 활성화조치 시행, 11월 8일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대북지원 재개 결정 등 인도적 지원 확대 조치 등 대북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도 “대결정책의 연속” 등으로 비난하면서 호응해 오지 않아 남북대화 여건은 조성되지 못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북한의 행태를 볼 때, 필요에 따라 한 편으로 대화 공세를 펼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도발을 감행하고 우리에게 대한 위협과 비난을 지속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북한의 이중적 태도에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계기시마다 북한에게 진정성 있는 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제2절 분야별 남북대화 개최 현황

1. 군사분야

가. 제38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제38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2010년 9월 30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 우 리 측 | 북 한 측 |
|------|----------------------------|--------------------------------|
| 수석대표 | 문상균(국방부 대령) | 이선권(조선인민군 대좌) |
| 대 표 | 정소운(통일부 과장) 김영철(국방부 대령) | 전창재(조선인민군 상좌) 홍석일(조선인민군 상좌) |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측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천안함 폭침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파견하여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2010년 9월 15일 통지문을 통해 “군사적 합의 이행과 관련한 현안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군사실무회담을 9월 24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는 입장 하에 2010년 9월 30일에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하였고, 이를 북한측이 수용함에 따라 제38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9월 30일 개최되었다.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은 우선 천안함 폭침이 객관적·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측의 소행임이 명확하게 규명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인 및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측 해역에 대한 북한측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적 도발행위, 우리 당국에 대한 비방·중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 민간단체의 북한에 대한 전단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 해군함정들이 북한측 해상경비계선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기 두 문제에 대해 우리측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남북관계의 전도가 좌우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우리측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북한측은 우리측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을 수용하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우리측이 대북 심리전 및 전단 살포 문제를 중단할 수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이 제기하는 전단 살포 문제는 그동안 북한측에 충분히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음을 설명하였고, 우리 함정들이 북한측의 소위 해상 경비계선을 침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함정들이 우리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하게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이 이를 거부하고 북한의 검열단을 수용하라는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회담이 종료되었다.

나. 제39차 남북군사실무회담(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제39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이 2011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 우 리 측 | 북 한 측 |
|------|----------------------------|--------------------------------|
| 수석대표 | 문상균(국방부 대령) | 이선권(조선인민군 대좌) |
| 대 표 | 정소운(통일부 과장) 김도균(국방부 중령) | 전창재(조선인민군 상좌) 조철호(조선인민군 상좌) |

2011년 연초부터 대화공세를 펼쳐왔던 북한은 1월 20일 통지문을 통해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반도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를 의제로 하는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하면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1월 말에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2011년 1월 26일 답신통지문을 통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의제로 하는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을 2월 11일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하였다.

이후 남북 간 협의를 거쳐 제39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2011년 2월 8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초 회담은 2월 8일 하루만 갖기로 하였으나, 협의가 길어짐에 따라 2월 9일까지 진행하였다.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우리측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를 제기하였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 확약이 있어야만 남북관계

가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쌍방 군부 사이의 상호 도발로 간주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중지할 데 대하여”를 의제로 제기하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만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고위급군사회담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강변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면, 북한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 사안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석대표 수준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국방부장관과 인민무력부장 혹은 합참의장과 총참모장”으로 제기하였고, 북한측은 “차관급(인민무력부 부부장 혹은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의제와 수석대표 수준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의제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회담 2일차 오후 회의에서 우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고 비난하면서, 갑자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측 입장을 밝히고 회담장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였다.

북한측은 “천안호 사건은 철저하게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변하면서 “미국의 조종 하에 남한측의 대북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연평도 포격은 우리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에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밝히겠다는 내용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동쪽의 머리 위에 포탄을 발사해 민간인이 사망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발생케 해놓고 도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하였다.

쌍방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해 이틀 동안 회담을 진행하였으

나, 북한측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억지 주장을 하면서 회담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2011월 2월 8일 ~ 9일)

2. 인도분야

가.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적십자회담」이 2010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 우리 측 | 북한 측 |
|------|------------------------------------|--|
| 수석대표 | 김용현(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 최성익(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
| 대표 | 김의도(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김성근(대한적십자사 과장) |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조정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

2010년 10월 1일에 개최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의 합의에 따라 개최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우선 2011년 3월부터 매월 남북 각 100가족씩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이산가족상봉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이미 상봉한 가족들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이산가족들이 원하는 시기, 장소에서 상시적으로 상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하였다. 상봉과 함께 2010년 12월부터는 남북 각 5,000명씩 이산가족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2011년 1월부터는 남북 각 1,000명씩의 이산가족들이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서신교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80세 이상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11년 4월부터 고향방문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도 제의하였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들의 전면적인 생사확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인도주의적 협력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 우리측에 쌀 5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는 상봉장소 문제가 결정적으로 풀려야 한다고 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실무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측의 지원 요청에 대해서 우리측은 대규모 대북지원은 적십자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국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금강산 관광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와 별개로 상봉 정례화와 직접 연계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남북은 상호 제기한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차기 「남북적십자회담」을 2010년 11월 25일 개최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

였다. 그러나 차기 「남북적십자회담」을 이틀 앞둔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킴에 따라 우리측은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측에 통보하였다.



남북적십자회담 (2010년 10월 26일 ~ 27일)

나.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2010년 9월 17일에 이어 9월 24일과 10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⁵⁾

| 구분 | 우리 측 | 북한 측 |
|------|------------------|----------------------|
| 수석대표 | 김의도(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
| 대표 | 김성근(대한적십자사 과장) | 박형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

5) 북한은 9월 24일과 10월 1일 실무접촉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관련 협의를 요구하며 강용철(아·태 평화위 참사)과 이경진(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장)이 대표로 추가 참석함.

북한측은 2010년 9월 1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내는 통지문을 통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하면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2010년 9월 17일 개성에서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갖자고 답신통지문을 보냈다. 이에 북한측이 동의함에 따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2010년 9월 17일에 열린 실무접촉에서는 우선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행사」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쌍방은 상봉 일정과 생사확인 의뢰 등 사전 준비절차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상봉 규모와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상봉 규모와 관련 우리측은 “기존보다 확대된 규모”로 실시하자고 하였으나, 북한측은 전례대로 100명 규모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상봉 장소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상봉은 “금강산 지구 내에서 진행되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사용은 권한 밖의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협의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2011년부터 매월 남북 각 100가족 규모의 상봉 정례화를 실현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도 반드시 협의·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상봉정례화는 남북관계가 풀리고 나서 좀 더 큰 회담에서 협의할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이번 실무접촉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안들을 9월 24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2010년 9월 24일 실무접촉에서도 지난 접촉 시 이견을 보였던 상봉 장소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우리측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상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으나, 북한측은 이산가족면회소 등 금강산지구 내 모든 시설이 몰수, 동결된 만

큼 면회소 이용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이산가족면회소는 금강산 관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로서 본연의 목적에 걸맞게 면회소에서 상봉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한편 우리측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제기하자, 북한측은 2010년 10월 중순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이산가족상봉 정상화 등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양측은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의 장소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차기 접촉을 10월 1일 개최하기로 하고, 접촉을 종료하였다.

2010년 10월 1일에 열린 세 번째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우리측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한 원칙적 입장을 확인한 북한측은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한 금강산 관광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접촉의 필요성을 재차 지적하면서도 이번 상봉행사만큼은 아무런 조건 없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실시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남북적십자 실무접촉(2010년 10월 1일)

이러한 협의결과를 토대로 남북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과 차기 적십자회담 개최 내용을 담은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를 채택하고 접촉을 마쳤다.

합의서 요지

1. 이산가족상봉행사를 2010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
 - ① 상봉 규모 : 남과 북 각각 100명
 - ② 상봉 일정 : 10월 30일 ~ 11월 1일 북한 방문단의 재남가족 상봉
11월 3일 ~ 11월 5일 남측 방문단의 재북가족 상봉
 - ③ 사전 절차 : 생사확인외서(10월 5일)·회보서(10월 18일)·최종명단(10월 20일) 교환
 - ④ 상봉 장소 : 이산가족면회소, 금강산호텔
 - ⑤ 선발대 : 상봉시작 5일 전 현지 파견
2.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진행

3.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민간 차원)

「백두산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가 2011년 3월 29일 문산의 남북출입사무소와 2011년 4월 12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두 차례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 우 리 측 | 북 한 측 |
|------|---|-----------------------------------|
| 수석대표 | 유인창(경북대 지질학과 교수) | 윤영근(화산연구소 부소장) |
| 대 표 | 김기영(강원대 지구물리학과 교수) 이윤수(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강근(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 장성엽(화산연구소 실장) 주광일(조선지진화산협회 위원) |

일본 대지진 등 세계 도처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사례가 잦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일한 활화산인

백두산의 폭발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던 시점인 2011년 3월 17일, 북한측은 우리측에 통지문을 통해 백두산 화산과 관련한 협의를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백두산 화산 활동에 대한 남북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선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 회의」를 2011년 3월 29일 우리측 지역인 문산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고, 이를 북한측이 수용함에 따라 성사되었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백두산 화산활동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중점을 두고 공동연구에 앞서 사전 '선행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백두산 화산활동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교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교환을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를 통해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방식 등을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측은 백두산 화산 활동에 대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문가 간 학술 토론회를 먼저 진행하고, 현지에 나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방식의 공동연구 방안을 설명하였다. 이 회의에서 남북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차기 회의 날짜와 장소는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2011년 3월 17일 회의 결과에 따라 우리측은 2011년 4월 6일에 「제2차 백두산 화산관련 남북전문가회의」를 4월 12일 개성에서 개최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측에 발송하였고, 이를 북한측이 수용함에 따라 제2차 회의가 4월 12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우리측은 백두산 화산의 현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두고 북한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화산활동 징후와 관련하여 예년에 비해 최근 백두산에 지진현상 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학술토론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남북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5월 초 평양 또는 편리한 장소에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후 6월 중순 백두산 현지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합의서」 요지

1.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남북학술토론회를 5월 초에 평양 또는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
2. 백두산 화산에 대한 현지답사 6월 중순 진행
3. 구체적 실무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우리측은 합의서에 따라 2011년 4월 28일에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남북학술토론회」를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측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아무런 답신을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남북학술토론회 및 백두산 현지답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제1차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
(2011년 3월 29일)



제2차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
(2011년 4월 12일)

제3절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발표(「5.24조치」) 이후 북한은 5월 25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전면폐쇄” 등을 선언하고, 그 후속조치로 5월 26일 적십자회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 업무 중지 및 통신 단절”을 통보하였다.

한편 북한은 2011년 초 대화공세를 펴면서 1월 10일 통지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단절하였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직통전화를 열고 연락업무를 재개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1월 12일부터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간 연락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로써 2010년 5월 26일부터 중단되었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간 연락채널이 8개월여 만에 복원되었다.

판문점 남북연락업무 재개 이후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남북 간 연락업무는 직통전화 운용 596회, 남북 연락관 접촉 14회, 통지문 수·발신 107건 등이다.



판문점 남북 연락관 접촉